

오동운 “2차 영장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사위 현안질의서 대국민 사과
“예측 못한 부분 많아… 책임 통감
내란 우두머리죄 등 영장 재신청해”
국민의힘, 탄핵소송 내란죄 제외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

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

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전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하게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

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늘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vs 野 “반대 시 내란동조”

거부권 행사한 ‘농업4법’ 등도 실시
與,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반대 고수
野 “내란 진압 위한 특검 출범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

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다 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

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나 위헌정당이나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등 운영 일정 확정

기관보고, 현장조사 등 안건 처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의 청문회, 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 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1월 14~15일 1~2차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에 열린다.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2월 13일까지로,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마치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차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여야 특위 위원 간 이견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

은 내란이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양고 없는 썩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뺐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르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崔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내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 방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

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폭주’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